

## 입학사정관제 토익·토플점수 반영못한다

대학입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토의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에는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7면〉

이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지원자격·선발기준·선발방법·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토익·토플·토플·JLPT(일본어능력시험)·HSK(한어수평고시, 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와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큰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제출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정부 지원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학년도 입시에선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천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박진표기자 lucky@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난장판

## 시민배심원 선정 기밀 누출 광주시장 후보여론조사 파행 전남지사 후보 등록 보이콧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과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경선도 곳곳에서 허겁지겁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 관리가 '총체적 무질서' 양상을 보이면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선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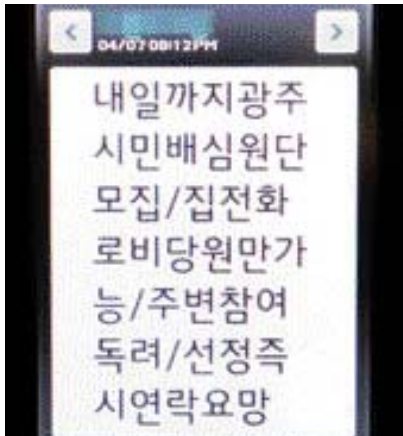
◇광주시장 후보 경선=7일 저녁부터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원 여론조사가 시작됐으나 이용섭 예비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파견한 참관인을 모두 철수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혁신 수석'을 경력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당 측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로 합의한 바 있다며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예비 후보는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와 경력 부분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며 "최종 협의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여론조사 기관 명단 유출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에서 광주시장 경선

예비 후보 대리인들이 여론조사 세부 규칙을 논의하던 중 정동재 예비 후보 대리인이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명단이 적힌 문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출처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건에 적시된 국민경선 여론조사 업체 10곳, 전 당원 여론조사 업체 12곳 등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5곳을 추천해 선정하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광주 시민배심원단이 되면 연락 달라라는 후보측의 문자메시지.

그동안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중앙당 개입설 등 각종 루머가 난무했다. 전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전남지사 후보

경선도 파행이다.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7일 마감된 경선 후보등록을 유보, 경선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도지사(후보)경선이 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선거인단의 구성 비율과 규모는 물론, 50%를 반영할 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련 구체적인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이날로 예정된 경선 후보 접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방식을 요구해왔으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배제됐다"면서 "반면 박준영 후보가 요구하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방식, 기초단체장의 경선 일자 연

기는 타당한 이유 없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짐으로써 경선의 불공정성을 당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경선=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천안함 침몰 정국'을 이유로 들인 1~2주일 연기, '옛가락 일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한 실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당직자나 시도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나 지역위원장 측근이 실사에 나서는가 하면 특정 후보와도 직접 접촉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된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임동욱·박지경·최원길 기자 tuim@kwangju.co.kr



생존자들의 눈물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언론 공개 진술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천안함 함미 절단면서 시신 1구 발견

### 정운찬 총리 "사고원인 밝혀진 후 거취 결정"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된 군인 시신 1구가 인양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고 원인이 밝혀진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7일 오후 4시께 침몰한 천안

함 함미 절단면 기관조정실 부분에서 김태석 상사의 시신 1구를 발견, 인양해 독도함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5·6면〉

군 관계자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가 있던 가족들이 김 상사의 시신을 확인했다"면서 "곧 평택의 2함대 사령부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정의 가스터빈 정비 및 보수유지 임무를 담당하는 내기부사관인 김 상사는 시신 발견 당시 상하의 모두 해군의 얼룩 무늬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남기훈 상사의 시신 발견에 이어 이날 김 상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 실종자는 44명이 됐다.

김 상사는 실종 기간인 지난 1일 자로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다.

군은 현재 SSU(해난구조대) 요원 10명을 수중으로 긴급 투입해 절단된 부근에서 추가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천안함 침몰사고를 둘러싼 책임 문제와 관련, "사고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국민)사과와 함께 거취까지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와 국방장관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사고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원인이 밝혀지면 필요시 누가, 어떤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4.20) 기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예술회관 오늘 참가신청 마감 문의 062-220-0541

**아모레퍼시픽 한울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와 소화와 균형 잡힌 '올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모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울 한방 스파 SHOP

- 1인 1실 개별
- 한방 화성탕 한울 전용 시설
- 온수제온수차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보존도
- 온·오프 Cashless 사용가능